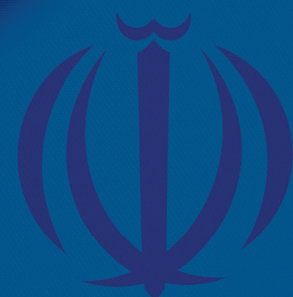


이란 전쟁의 주요 쟁점과 정책 대응 방향 -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의 초크포인트 정치와 한국의 좌표 -



김세진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센터장(변호사)
sejinkim@shinkim.com

저자 소개

김세진은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으로, 경제안보 · 국제분쟁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주 항소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WTO 분쟁과 ISDS 사건에서 정부 · 기업을 대리해 왔다. 저서로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가 있다.

국문요약

2026년 미국 · 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과 그에 따른 호르무즈 사실상 봉쇄는 단순한 에너지 충격이 아니라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본고는 이를 현안 · 시나리오 · 대응의 세 층위로 분해한다. 핵심 진단은 자유무역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다는 것, 나아가 그 조건이 객관적 규범에서 강대국의 사적 재량으로 부과되는 ‘강요된 조건성’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위기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자원의 생산 · 경로 · 계약의 주권적 유효성이 흔들리는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의 전면화에 있으며, 헬륨 · 브롬 · 황의 동시 교란처럼 충격은 에너지를 넘어 소재 · 식량 · 방산으로 연쇄한다. 한국은 호르무즈 의존도가 가장 높은 최대 피해국인 동시에 LNG선 · 메모리의 결절점을 점하는 불가결국이나, 그 결절점은 추격에 노출된 동적 자산이다. 세 가지 구조적 단절은 정치적 지속성이 차등적이며, 핵심 과제는 봉쇄 해제 시점이 아니라 새 질서 안에서 계약 · 전략 ·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다. 견디는 나라를 넘어 설계하는 나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요 키워드

#호르무즈봉쇄 #물류이전단계리스크 #공급망안보
#조건부자유무역 #경제안보

I. 서론: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시설과 안보 기반을 타격하였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이를 ‘임박한 위협(imminent threat)’의 제거를 위한 자위권 행사로 규정하였으나, 작전 개시 24시간 내에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다수의 핵심 인사가 제거되면서 분쟁은 단기 응징의 범위를 넘어섰다.¹⁾ 미 정보당국조차 ‘임박한 위협’의 실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대량살상무기를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장기 불안정으로 귀결된 전례를 환기시킨다.²⁾

이 전쟁을 유가의 등락으로만 읽는 것은 분석의 절반을 놓치는 일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통하는 구조의 변화다. 1989년 후쿠야마가 선언한 ‘역사의 종언’ 명제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편화 — 는 1995년 WTO 출범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FTA의 폭발적 확산이라는 30년의 작동으로 입증되는 듯하였고, 한국은 그 질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동맹국에 대한 25% 관세, 흑연 수출허가의 정치화, 호르무즈 봉쇄라는 오늘의 풍경은 그 명제가 가정한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의 종언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야 한다. 즉, 위와 같은 무조건성의 종언이 자유무역의 완전한 종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조건이 불기 시작했을 뿐이다.³⁾ 다시 말해, 보호주의의 강화와 무역 자유화 조치의 확산은 종래 상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에는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한 축에서 관세·수출통제가 강화되는 동안 다른 축에서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이나 핵심광물 협정과 같은 새로운 자유화·규범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⁴⁾ 따라서 핵심 질문은 ‘자유무역이 죽었는가’가 아니라 ‘무역에 붙는 조건이 어떻게, 누구에게 달리 부과되는가’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관계에서도 분석의 초점은 ‘연계 여부’가 아니라 ‘연계 방식’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의식 위에서 현안·시나리오·대응을 검토한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양가적이다. 한국은 세계 원유 무역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에 에너지 수급을 깊이 의존하는 최대 피해국이다.⁵⁾ 그러나 동시에 세계 LNG선 건조의 절대적 비중과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결정점을 점하는, 누구도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불가결국’이기도 하다. 취약성과 불가결성은 동전의 양면이며, 위기와 기회는 같은 곳에서 발원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위치는 주목할 만하다.

1)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Legal Adviser, “Operation Epic Fury and International Law,” 21 April 2026.
2) Arab Center Washington DC, “Epic Fury: Washington’s Contradictory War Aims in Iran,” 8 March 2026; Heather Cox Richardson, “February 28, 2026,” Letters from an American, 28 February 2026 (noting the absence of evidence of an imminent threat).
3) 김세진, <조건부 자유무역시대> (생각의 힘, 2025), p. 19.
4) “Op-Ed: Carney’s middle-power mirage,” Canadian Affairs, 18 March 2026 (the “prisoner’s dilemma” in which middle powers scramble for bilateral accommoda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Can smaller economies really create a new world trade order?” 12 February 2026 (on DEPA and middle-power rule-making).
5) Britannica Editors. “How Much Oil Passe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Encyclopedia Britannica, 27 Mar. 2026, <https://www.britannica.com/topic/How-Much-Oil-Passes-Through-the-Strait-of-Hormuz>. Accessed 3 June 2026.

II. 현황 1: 2026년 이란 전쟁의 성격 규정

이번 전쟁을 정확히 규정하려면 2025년의 이른바 ‘12일 전쟁’과의 차별점을 분리해야 한다. 다섯 가지가 결정적이다.

첫째, 전쟁 명분의 취약성이다. 2025년 작전 당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활동이 IAEA와 이란 측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이번에는 그러한 객관적 확인이 결여되었다. 워싱턴 분석기관들도 대체로 이번 작전을 사실상 이스라엘이 주도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지전의 지역 전쟁화다.** 이란의 방공망이 이미 와해되어 공습을 막을 현실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란의 대응은 드론·미사일과 비대칭 수단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카타르 라스라판(Ras Laffan) LNG 단지와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가 표적이 되어 전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었다.⁶⁾ **셋째, 미국 우방의 분열이다.** 영국·스페인 등이 군사기지 제공을 거부하고 미국이 이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동맹 내부의 균열이 노정되었다. **넷째, 미국을 직접 겨냥 타격이다.** 2025년 ‘약속대련’식의 제한적 응사와 달리, 이번에는 개전 초기부터 역내 미군 시설과 공관이 피격되어 출구 전략의 난도가 높아졌다. **다섯째, 사상 최초의 실질적 호르무즈 봉쇄다.** 이란의 봉쇄 위협은 자국 교역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번도 현실화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군사적 봉쇄가 아니라 보험·해운이라는 ‘키 서비스(key service)’의 마비를 통해 사실상의 봉쇄가 성립하였다. 로이즈 시장협회 합동전쟁위원회(JWC)가 페르시아만 전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전쟁보험이 철회되면서, 개전 후 해협 통항량은 약 95% 급감하였다.⁷⁾ 이 점이 이번 위기의 성격을 규정한다.

위와 같은 다섯가지 특징에 더하여 추가로 주목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 차이다. 양국은 군사 목표 궤멸에는 일치하나, 이란 에너지 인프라(북부 유전·사우스파스 가스전) 타격을 둘러싸고는 이견을 노정하였다.

미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자제를 선호한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래 국력 약화를 겨냥하였고, 미국이 이를 알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양상이 나타났다.⁸⁾ 다른 하나는 핵 능력의 본질이다. 미국은 GBU-57 벙커버스터로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을 타격하고 핵 능력을 ‘소멸’시켰다고 발표하였으나, IAEA 보고와 독립 분석기관의 평가는 포르도 심부 시설의 상당 부분이 잔존하며 60% 농축 우라늄 재고의 향방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⁹⁾ 일각에서는 이란이 여전히 다수의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⁰⁾ 시설과 인력을 제거해도 지식과 물질은 잔존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핵 문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6) Reuters, “Helium prices soar as Qatar LNG halt exposes fragile supply chain,” 12 March 2026.
7) Lloyd’s Market Association, *Safety Concerns, Not Insurance Availability, Driving Reduced Vessel Traffic in the Strait of Hormuz* (March 23, 2026).
8) Eric Lob, *The Diverging U.S. and Israeli Goals in Iran Are Making the Endgame Even Murki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Emissary (Mar. 20, 2026).
9) CSIS, “Operation Epic Fury and the Remnants of Iran’s Nuclear Program,” 28 February 2026.
10) Matthew Bunn (Harvard), quoted in “Energy secretary: Iran ‘frighteningly close’ to nuclear weapon despite Operation Epic Fury,” Military Times, 14 May 2026.

III. 현황 2: 호르무즈 봉쇄와 ‘물류 이전 단계’ 리스크의 연쇄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21해리에 불과하나, 2025년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석유제품(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5분의 1)과 세계 LNG 무역의 약 20%가 통과한다.¹¹⁾ 2026년 1분기 통항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하여 하루 14.6백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¹²⁾ 이 해협의 진정한 급소는 군사력이 아니라 보험과 해운 서비스다. 한 발의 포격 없이도 위험 인식만으로 선박보험의 부보가 거부되면 자연스럽게 해협은 닫힌다. 이는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이 물리적 봉쇄 없이 보험료 급등만으로 통항을 상업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2024~2025년 사례와 동일한 메커니즘이며, 보험시장이 분쟁을 군사작전보다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보험의 무기화’로 평가된다.¹³⁾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이번 위기의 핵심이 1차 충격(에너지 가격)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초크포인트의 전략적 활용이 상시화되는 국면에서는 봉쇄의 1차 충격보다 그 이면의 2·3차 연쇄 충격에 대비하는 ‘입체적 전략’이 요구된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석유 통로가 아니라 자원의 주권적 존재 가능성·경로의 주권적 개방성·계약의 주권적 유효성이 동시에 시험되는 ‘물류 이전 단계(pre-logistic)’의 무대다.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핵심 소재의 동시 교란이다. 이들 주요 핵심소재들의 교란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헬륨. 헬륨은 천연가스 액화의 부산물로, 카타르가 세계 공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한다. LNG 생산이 멈추면 헬륨 생산은 자동적으로 0이 된다. 3월 라스라판 시설 피격 직후 카타르에너지는 장기 LNG 계약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였고, 한국·중국·이탈리아·벨기에 등의 구매자가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 헬륨 수입의 약 64.7%를 카타르에 의존한다. 액체헬륨은 약 45일 내 기화·손실되고 운송용 특수 극저온 ISO 컨테이너 약 200기가 중동에 고립되었으며, 양대 메모리

기업의 재고는 6월경까지로 추정되었다.¹⁴⁾ 여러 평가기관들은 이 헬륨 충격이 AI 데이터센터 build-out을 떠받치는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병목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¹⁵⁾

브롬. 브롬은 더 구조적이다. 한국은 브롬 수입의 97.5%를 이스라엘에 의존하며, 이는 DRAM 식각 공정과 AI 서버 PCB 난연제의 원료다. 이스라엘 ICL 그룹이 사해 인근 소돔(Sodom)에서 생산하는데, 사해의 브롬화물 농도가 해수의 수백 배에 달해 가격 경쟁력의 지질학적 우위가 형성되어 기술 개발로 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설비는 이란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 안에 있고, 이스라엘·요르단이 세계 액체 브롬 공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브롬 리스크는 다변화나 재고로 풀리지 않는, 자원의 지리 자체가 주권 충돌의 장(場)이 된 전형적 pre-logistic 문제다.¹⁶⁾

황(黃). 가장 과소평가된 소재는 황이다. 세계 황 공급의 약 90%가 석유 정제·천연가스 가공의 부산물이며 한계비용이 사실상 영(零)이어서, 어떤 국가도 전략 비축을 하지 않았고 어떤 핵심광물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가스 수송 현황과 시장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6-6호, 2026. 4. 6.

12)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 (citing U.S. EIA Global Energy Security Data report), 12 May 2026.

13) Modern War Institute at West Point, “The Insurance Weapon: Irregular Warfare at the Strait of Hormuz,” Irregular Warfare Initiative, 24 March 2026.

14) Tom’s Hardware, “Qatar helium shutdown puts chip supply chain on a two-week clock,” 12 March 2026.

15) Reuters, “Helium stocks of South Korea’s chipmakers to last until June, sources say,” 31 March 2026.

16) War on the Rocks, “The Bromine Chokepoint: How Strife in the Middle East Could Halt Production of the World’s Memory Chips,” 14 April 2026.

걸프 지역이 세계 해상 황 무역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¹⁷⁾ 황은 비료(인산비료의 가용화), 방산(레이더용 가공 구리·정밀탄약), 배터리 금속(니켈·코발트 추출용 황산)을 동시에 떠받친다. 황산 수요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2040년까지 2억 4,600만 톤에서 4억 톤으로 급증하는 반면 부산물 공급은 정제 처리량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부산물의 덩(byproduct trap)’이 작동한다.¹⁸⁾ 그 결과 배터리 금속 가공업체가 더 높은 마진을 무기로 비료 생산자를 제치고 희소한 황산을 사들이면서, 식량 생산이 에너지 전환에 구조적으로 종속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¹⁹⁾ 황 하나가 방산·식량·배터리라는 세 산업을 같은 해협에서 동시에 질식시키는 이 구도야말로 2·3차 연쇄 충격의 전형이며, 중국은 이미 황산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²⁰⁾

이 충격들은 한국에 수렴한다. 헬륨 64.7%, 브롬 97.5%, 원유 의존이 모두 호르무즈와 그 인접 지리에 묶여 있다. 양대 메모리 기업의 합산 HBM 점유율은 세계 시장의 다수를 점하므로, 한국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 위에 올라탄 AI 인프라 전체가 흔들린다. CSIS가 지적하듯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건설에 필수적인 반도체·금속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순은, 한국의 취약성이 곧 세계의 취약성임을 방증한다.²¹⁾

이 취약성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한·일이 공유하는 구조적 동조(structural synchronization)의 성격을 띤다. 양국은 마그네슘·희토류·천연흑연·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의 대외 의존도가 거의 동일하며, 나프타·헬륨·브롬과 같은 중동 의존 소재의 병목을 같은 시점에 겪는다. 일본 역시 액체 브롬의 70% 이상을 이스라엘에 의존하여, 한국의 브롬화수소소(HBr) 중간재 공급에서도 일본을 경유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동시에 양국은 대미(對美) 투자를

대규모로 약속하며 산업의 동시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같은 위협과 같은 기회가 한·일 수직 분업을 공급망 차원의 결절점으로 다시 묶는 국면이며, 이는 한국이 일본과의 경쟁이 아니라 보완·공조의 관점에서 중동 리스크를 관리할 여지를 시사한다.

17) Modern War Institute at West Point, “The Chokepoint We Missed: Sulfur, Hormuz, and the Threats to Military Readiness,” 13 March 2026.

18) Atlantic Council, “The Hormuz crisis is making low-carbon energy strategies more expensive,” 8 April 2026.

19)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Fertilizer isn’t get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12 March 2026.

20) Heatmap News, “The Hormuz Closure Is Driving a Shortage of Battery Ingredients,” 21 April 2026.

21) World Economic Forum, “Beyond oil: 9 commodities impacted by the Strait of Hormuz crisis,” 1 April 2026.

IV. 분석 : ‘조건부 자유무역’에서 ‘강요된 조건성’으로

앞서 서두에서 필자는 앞으로 자유무역은 소멸하지 않고, 대신 ‘조건이 붙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명제는 한 단계 더 정밀화될 필요가 있다. 조건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30년 동안에도 무역에는 조건이 있었으나, 그 조건은 비차별·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와 같은 보편 규범의 형태로 객관화되어 있었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같은 잣대로 다룰 수 있었고, 한국 같은 중견 무역국이 자유주의 시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은 동맹과 비동맹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그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CHIPS·IPEF는 까다로운 요건(FEOC 등)을 붙이면서도 동맹국이 미국 시장과 보조금에 접근할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어 두었고 다자 협력의 틀을 유지하려 하였다. 반면 트럼프 2기의 10% 일률 상호관세, USMCA를 무시한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한국 플랫폼법에 대한 보복 시사는 동맹과 비동맹의 경계 자체를 흐리고 있다. 이는 객관적 규범의 적용이 아니라 강대국의 사적 재량으로 부과되는 조건, 곧 ‘강요된 조건성(imposed conditionality)’의 등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건이 붙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이 사적 조건으로 대체되는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 구분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편 규범으로서의 조건은 ‘준수(compliance)’의 대상이지만, 사적 재량으로서의 조건은 ‘교섭(negotiation)’의 대상이 된다. 전자가 범무기능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외교와 산업정책이 통합된 역량의 영역이다. ‘국제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장소가 달라졌다’는 명제의 실질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WTO 패널의 다자 규범 해석에서 한미 FTA 제22.4조(c)항과 같은 양자 채널의 분석으로, 정부 간 규범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로, 국제법이 작동하는 장소가 이동한 것이다.

V. 시나리오: 전쟁의 전개와 세 단절의 차등적 지속성

전쟁의 향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속 기간을 가르는 상반된 힘을 분리하면 시나리오의 윤곽이 잡힌다. 장기화 요인으로는 (가) 최고지도자 제거로 ‘완성된’ 시아파의 순교 서사, (나) 군 통수권이 최고지도자에게 있는 이란의 독특한 정치 체제, (다) 대리 세력 제거와 네타냐후 총리의 국내 정치적 동기가 있다. 반대로 단기 제한 요인으로는 (1) 역외 개입에 반대하는 미국 MAGA 여론과 11월 중간선거, (2)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미국 정치의 역학, (3) 제재 회피 교역마저 막힌 이란의 외환 고갈, (4) 전장화로 경제발전 전략이 위협받는 역내 국가들의 확전 방지 압력이 있다.

이 힘들의 충돌에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시나리오 A(고비용 통항 체제): 미국이 항모 전단을 원위치로 복귀시키고 이란이 주도하는 ‘유료 통항’ 구조가 정착하는 경우다. ‘완전 봉쇄’에서 ‘비싸지만 통과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며, 통항료와 고공행진하는 전쟁보험료가 상수가 된다. 실제로 3월 말 추가전쟁보험료(AWRP)는 협상 타결 기대 속에 일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평시의 수십 배 수준에 머물렀다.²²⁾

시나리오 B(장기 불가항력):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어 카타르 LNG 시설의 불가항력 상태가 최대 5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다. 손상된 트레인의 복구 장비(공기분리장치·극저온 열교환기)는 납기가 3~5년이고 소수 기업이 독점하므로, 한번 멈춘 공급은 회복이 더디다.²³⁾

22)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War Risk Insurance Cost Off Highs but Still Elevated in Persian Gulf” 30 March 2026.
23) Reuters, “Fitch signals downgrade risk for Qatar over post-Iran war security concerns,” 30 March 2026.

시나리오 C(동맹 재편): 미군 기지까지 철수하며 중동 에너지 동맹 자체가 재편되는 경우로, 걸프 국가의 미군 기지 잔류 여부가 분수령이 된다.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미국이 사적 보험시장을 대신해 전쟁보험을 backstop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질서의 성격 변화를 상징한다.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처브(Chubb)를 주관사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해상재보험 facility를 구성하여 통항 재개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상업적 위험 이전과 국가 정책의 경계가 무너지고 ‘정부가 최종 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가 되는 국면을 보여준다.²⁴⁾ 강대국들이 승리가 아니라 ‘확전 회피’를 추구하는, ‘관리되는 불안정(managed instability)’의 질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정치학적 정밀화가 필요하다.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구조적 단절(즉, 관세의 무기화, 통상·산업·안보의 통합, pre-logistic 리스크의 전면화)은 정치적 지속성에서 동일한 무게를 갖지 않는다. 어떤 변화가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는 그것을 떠받치는 정치적 토대(사회적 균열의 깊이, 제도적 정착의 정도, 외부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의 무기화는 행정명령과 사법심사에 의존하므로 제도적 정착도가 낮고 2028년 대선 결과에 따라 가변적인 영역에 가깝다. 통상·산업·안보의 통합은 제조업 쇠퇴에 대한 분노와 대중(對中) 견제라는 양당 합의에 가까워 중간 정도의 지속성을 가진다. 반면 pre-logistic 리스크의 전면화는 단국 질서의 침식이라는 외부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미국 국내정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트럼프에 적응하는 일’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에 대비하는 일’은 같은 작업이 아니며, 한국의 자원 배분도 이 차등적 지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주요 제3국의 항배도 함께 읽어야 한다. 러시아는 원유 제재의 일시 해제로 고유가 혜택을 누리고 ‘임박 위험론’의 논리적 여지를 확보한 최대 수혜자다. 중국은 중동산 원유 도입 차질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동시에, 미국이 중동전에 발목 잡히며 대중 압박 여력을 상실하는 반사이익을 본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 속에 경제·안보 다변화를 모색하고, 유럽은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을 재차 노출한다.

그리고 미중 관계에서 경계해야 할 변수는 미·중 ‘갈등’이 아니라 미·중 ‘공모(collusion)’다. 경쟁하는 두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묵시적으로 협조하고, 그 협조가 중소국의 전략 공간을 구조적으로 좁히는 구도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압박에 응해 자국 내 중국계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장악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섰으나, 이후 미·중이 1년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하면서 네덜란드는 보복과 비판을 홀로 떠안은 채 며칠 만에 경영권을 반환해야 했다.²⁵⁾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자회사 규칙(Affiliates Rule)’이 통제 대상을 해외 자회사로 확장한 것은, 동맹국 기업조차 미·중 합의의 사석(捨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²⁶⁾ 동맹의 이름으로 먼저 희생한 나라가 오히려 홀로 남겨지는 이 구도 위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 또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24) Reuters, “Chubb announces war-risk coverage to support ships through Strait of Hormuz” 21 March 2026.
25) Lawfare, “The Nexperia Crisis Shows Why Export Controls Need Allied Coordination,” 27 January 2026.
26) Bruegel, “The Nexperia crisis: a wake-up call for Europe’s approach to Chinese investment,” 23 December 2025.

VI. 대응 방안 1: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

끝으로 핵 협상의 향방이 시나리오 전반의 변수로 남는다. 2015년 핵합의가 비공식 고위급 채널을 통해 타결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현재도 복수의 중재국이 개입한 막후 협상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으나, 쟁점은 '이란 영토 내 농축 권리의 허용'과 '기존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회석'으로 환원되었고 여기에 전쟁 배상·사과·재발 방지라는 새로운 난관이 더해졌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제재 해제의 타이밍, 정권 교체 후 계약 승계의 유효성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잔존하므로, 기업으로서는 '타결 시나리오' 자체도 별도의 리스크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응의 출발점은 한국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대체로 일본과 함께 호르무즈 통항 원유에 '특히 의존적'인 국가로 분류된다.²⁷⁾ 첫째, 에너지 측면에서 전략비축유 방출은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근본 해법이 아니다. 정부는 UAE 특별 도입 물량을 넘어, 러시아·이란산 원유 도입 가능성까지도 수출통제나 경제제재 규범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걸프산 나프타를 러시아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²⁸⁾ 다만 미국이 부여한 제재 유예는 모두 조건부이며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한계를 전제로 운용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금융권의 실무는 미국 제재 법규와는 별개로 운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이 조건부 유예를 통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금융권이 해당 수입대금의 송금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러시아 원유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형성된 한국 금융권의 자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체제가 미국의 금융제재와 정밀하게 연계되어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은 '다변화로 풀리는 문제'와 '다변화로 풀리지 않는 문제'의 구별이다. 헬륨은 미국·알제리 등으로 대체 공급선을 선제 확보할 여지가 있으나, 사해 브롬과 같은 지질학적 단일실패점은 다변화나 재고로 해결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비축 프로그램과 더불어, 위기 시 우선 배분을 담보하는 국가간·기업 간 약정을 미리 설계해 두는 접근이 요구된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재 국산화 선언에도

27) IEA, "Strait of Hormuz" ("Japan and Korea particularly reliant on oil flows passing through the Strait") last updated Feb. 2026.

28) The Next Web, "South Korea turns to Russian naphtha as chip supply chain faces Middle East crisis," 31 March 2026.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 수입에 의존했던 교훈은, 브롬처럼 우회 경로조차 없는 품목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셋째, 통상·규범 측면이다. 이란·러시아 제재는 대상국의 외화 수입을 차단하면서도 에너지 수급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체계이므로, 통항료 지불이 대이란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 OFAC 라이선스가 필요한지와 같은 실무 판단이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금융권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또한 개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이란 주도의 유류 통항 체제가 UNCLOS상 무해통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국은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관련 다자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할 자격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식량·비료 안보다. G7조차 전략 석유비축에 상응하는 비료·암모니아 비축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우디의 홍해 우회 송유관은 암모니아가 아닌 원유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한국 역시 비료·암모니아의 전략적 취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거버넌스의 재설계다. 산업·통상·외교·안보가 한 몸이 된 시대에, 산업통상부·외교부·국가안보실이 각자 일하는 분리된 거버넌스로는 강요된 조건성에 대한 '교섭'도, 결절점을 협상력으로 전환하는 '환류'도 일어나기 어렵다. 통상이 더 이상 통상이 아닌 시대는 한국형 통상안보 거버넌스의 통합적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는 조직 개편의 문제이자, 결절점을 식별·평가하는 정보 역량, 그것을 협상 자산으로 변환하는 제도 역량, 협상 결과를 다시 결절점 강화로 환류시키는 전략 역량을 한데 묶는 문제다.

여섯째, 외교·산업의 공세적 활용이다. 종전 후 중동 인프라 복구는 가장 시급한 국제 현안이 될 것이며, 시공 능력과 공기(工期) 면에서 한국 컨소시엄의 경쟁력은 검증

되어 있다. 사우디·UAE·카타르·이라크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민관협력(PPP) 진출에 필요한 금융 패키지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와 연계해 사전 설계해야 한다. 미군 철수 후 중동의 안보 공급선 다변화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실전 검증된 방공체계를 비롯한 K-방산의 진출 기회 또한 AI·전력·방산·에너지를 묶은 UAE식 다층 협력 모델을 참고하여 포착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이란·러시아·북한 연계 고리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VII. 대응 방안 2: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

기업에게 이번 이란 위기는 무엇보다 ‘계약의 위기’다. 관련 하여, 가장 빈번하게 검토되는 첫번째 쟁점은 호르무즈 봉쇄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협이 재개되면 불가항력이 소멸하는지다. 여기서 ‘물리적 불가능(impossibility)’과 ‘경제적 불합리(impracticability)’의 구별이 결정적이다. 이란의 유류 통항이 가능해지면 물리적 불가능 상태는 해소되지만, 통항료와 폭등한 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불합리 상태는 잔존한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리므로, 기업은 자사 계약의 불가항력 ‘소멸’ 기준을 즉시 확인해야 한다. 카타르가 안전 불보장을 이유로 불가항력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수입사는 통항 기능을 이유로 이행을 요구하는 충돌이 이미 예상된다.

둘째, 운송·보험 영역이다. BIMCO의 CONWARTIME류 전쟁위험 조항에 따르면 선주는 위험 항로 통항을 거부할 수 있는데,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이나에 따라 책임 귀속이 달라진다. 정기용선은 항로지시권이 용선자에게 있어 책임이 용선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항해용선은 특정 항로 지정으로 계약 목적 자체가 불능이 될 수 있다.²⁹⁾ 전쟁위험 보험(War Risk)의 담보 범위, 추가 보험료 부담 주체(VOYWAR/CONWARTIME상 원칙적으로 용선자 부담), 나포·억류 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사전에 전수 점검해야 한다. IRGC의 공격을 국가행위로 볼 것인지 테러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담보 조항이 달라지므로, 정박 중·통과 중·부유기뢰 등 상황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소재 조달 계약은 미래를 대비하는 설계가 관건이다. 헬륨·에틸렌 등 핵심 소재 공급계약의 불가항력·대체조달 조항을 즉시 검토하고, 신규 계약에는 시나리오별 조건부 조항(contingency clause), 공급 중단 시 가격 상한 연동, 복수 공급처 의무화를 삽입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일정 기간(예: 5년)을 초과하면 계약 해제권이 발동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장기계약처의 조기 확보가 안전하다. 컴플라이언스 또한 필수적이다. 1차 제재와 2차(secondary) 제재의 구조를 이해하고 OFAC의 SDN 리스트 노출 범위를 점검하지 않으면 받은 대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위기의 이면에는 기회가 있으나, 그 기획의 토대인 결정점은 ‘정태적 자산’이 아니라 ‘동적 자산’임을 직시해야 한다. LNG선 84%, HBM 70%라는 수치는 협상력의 ‘현재 잔고’이지 영속하는 흐름이 아니다. 미국 CHIPS Act, 일본 라피더스, 중국의 자급화가 한국이 우위에 선 거의 모든 영역에서 추격을 진행 중이며, HBM에서 마이크론과의 격차는 좁혀지고 LNG선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 점을 함께 보면 한미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와 별도 대미 투자 2,000억 달러(한국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대외 투자약속)의 양면성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과 안보 자산에 대한 접근권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R&D·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을 동반한다. 따라서 신규 수주·투자 계약에 전쟁위험·불가항력을 선제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이 ‘미국 시장 안의 전략적 거점’으로 환류되도록 설계하는 역량이 관건이다.

끝으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전쟁위험 특약의 담보 범위와 CONWARTIME류 조항을 전수 확인하고 추가보험료 부담 주체를 사전 정리하는 것, (2) 통항료 지불 구조를 제3국 에스스로 등으로 설계하되 OFAC 라이선스 필요 여부를 선제 검토하는 것, (3) 헬륨·에틸렌 등 핵심 소재 계약의 불가항력·대체조달 조항과 납기 지연 시 손해배상 구조를 점검하는 것, (4) 산업부·에너지

29) Lloyd’s List, “Gulf war risk premiums topping double-digit millions of dollars per trip,” 11 March 2026.

VIII. 결론: 다자에서 양자로, ‘견디는 나라’에서 ‘설계하는 나라’로

공단의 소재 비축 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 (5) 신규 계약에 공급 중단 시 가격 상한 연동·시나리오별 조건부 조항·복수 공급처 의무화를 표준 삽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분쟁의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란 전쟁은 한국이 전략산업의 결절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냈다. 반도체·바이오·2차전지·로봇·조선·방산·원자력이 세계 공급망의 급소를 이루고 있고, 그 급소가 헬륨·브롬·황과 같은 보이지 않는 소재와 호르무즈라는 21해리의 해협 뒤에 묶여 있다. 취약성과 불가결성은 한몸이다.

다만 분쟁의 장소가 다자에서 양자로 옮겨졌다는 사실에는 분명한 비용이 따른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살아 있던 시절 한국은 미국·일본을 상대로 동등한 자격으로 다룰 수 있었으나, 양자주의 시대에는 그 공통의 보호막이 사라진다. 정부 간 규범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로의 이동 역시 비용 부담의 이전을 동반한다. 요컨대 ‘국제법이 일하는 장소가 달라졌다’는 진단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장소 이동의 비용은 모든 행위자에게 같지 않으며 다자주의의 최대 수혜국이었던 한국에 비대칭적으로 더 크게 부과된다. 이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잔존하는 다자 규범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양자 협상력을 키우는 이중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 이중 전략의 한 축이 중견국 연대다. 예컨대, 유럽·일본·한국·호주·캐나다를 합치면 GDP 총합이 미국을 능가하고 중국 무역량의 세 배에 이르며 세계 최대의 R&D 역량을 보유한다.³⁰⁾ 핵심 광물·첨단에너지·AI 연구에서 이들의 협력은 자원·경제적 강압에 대한 취약성을 낮출 수 있다.³¹⁾

30) Mark Carney, address reported in “Carney’s coalition vision depends on others stepping up” AAP News, 5 March 2026 (“Europe, Australia, Canada, Japan, South Korea: this coalition has a GDP larger than the United States, three times the trade flows of China”).

31)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Seeking Agency in Uncertainty: Asian Middle Powers and the Fragmenting Global Order,” 2 April 2026.

그러나 환상은 금물이다. 미국 관세나 중국의 강압에 직면한 중견국들은 ‘가변적 기하학’으로 연대하기보다 각자 양자적 타협을 모색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기 쉽고, 한국·일본·EU가 워싱턴과 개별적으로 관세 면제를 다툼 전례가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pre-logistic 리스크가 단극 안전보장의 침식에 뿌리를 둔 것이라면, 그 안전보장 자체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중견국 연대가 단극의 공백을 어디까지 메울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연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강요된 조건성에 맞서는 교섭력을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결국 한국의 강점이 자동으로 전략 공간을 열어주지는 않는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미국 내 생산거점과 기술 협력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것, 방산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규제 구조임을 인식하고 그 언어를 익히는 것, 핵심 소재의 공급 차질을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협상 레버리지로 전제하고 공급망과 계약을 재설계하는 것 —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통상·외교·안보를 한 몸으로 묶는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 오늘의 핵심 질문은 더 이상 ‘붕쇄가 언제 풀리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 안에서 계약·전략·거버넌스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이다. 변화의 시기에는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된다. 한국은 이 변화를 수동적으로 ‘견디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나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진실로 엄중한, 그러나 기회가 위기와 같은 곳에서 솟아나는 시기를 살고 있다.

